

국민의당 “秋-민주당 조치 없으면 국회 일정 보이콧”

김동철 “추미애, 당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추 대표와 민주당의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당장 국민의당 협조를 바탕으로 추경 심사 강행을 추진했던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미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끊는 아비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준용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과거 행적을

보면 추 대표는 정말 우리 정치권을 진작 떠났어야 될 분”이라며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탄핵 역풍이 부니까 다시 총선 때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 악어의 눈물로 생각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추 대표는) 2009년 12월 환노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노동관제법을 3분 만에 넘기기 통과시켰다”며 “작년 11월엔 국정농단 바근해 전 대통령과 복단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해 촛불시민혁명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해 12월 1일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국현안을 논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느냐는 메모를 주고받아 파문을 일으켰다”며 “지금이라도 추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직에서 사퇴함은 물론 정계 은퇴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간 이후 추 대표와 민주당 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낸 여러 가지 협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진정성 없는 거짓 제언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우원식 “秋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곤혹스럽다”

“원내 지도부와 상의 한바 없어” 선 그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삼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참석 전 뉴시스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앞서 추 대표에게 ‘분준용 제보조작’ 파문 관련 발언 수위 조절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제 국민의당과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 장관 후보자도 처

피문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추 대표 측은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가 (분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계없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충실했던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민관 불참을 선언했다. 추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와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공관 미래창조 정관직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바른정당 “文대통령, 포퓰리즘 국정운영…우려스러워”

“국민 약속한 5대 인사원칙 어기고 장관 후보자 내정”

바른정당은 6일 “포퓰리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어기고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회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비리·무자격 후보자들을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일

방적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는 인사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 선언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수십 년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탈원전 선언을 문 대통령은 집권 하자마자 독단적으로 선언했다”며 “한참 건설적인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키더니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기를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협치를 이루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친박 반발에도洪 인선 ‘마이웨이’…친박 ‘부글부글’

주요 당직자 측근들 채우자 불쾌…“사당화 우려”



친박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들로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친박계는 일단 공개적 비판은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부글부글’ 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홍문표 사무총장, 김대식 최고위원,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전희경 대변인 등 홍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당의 실립을 맡는 사무총

장에 바른정당 탈당파이자 홍 후보와 가까운 홍문표 의원, 당 심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수장에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친박계의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초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는 홍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자신의 최측근인 이종혁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사당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홍 대표에게 ‘고른’ 인선을 주문해 왔지만 홍 대표가 결국 주요 당직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친박계 의원은 “홍준표 ‘문고리 30방’ 중 한명인 이종혁은 최고위원에 지명하고, 김대식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시키고, 해도 너무한다”며 “모든 인사에 자기사람 심기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홍문표 사무총장은 옛 날에 우리 당에서 사무총장을 했다가 바른정당에 나갔다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사무총장에 앉혀서 어떻게 혁신과 변화를 이를 수 있겠느냐”며 “너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최고위원도 “당이 지금 혁신하고 혁신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당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우려스럽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김태흠 “친박 있었으면 내가 전당대회 1위…이제 친박無”

친박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6일 “친박이 있었다면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연석 회의에서 “언론에 제가 홍 대표께 제 입장에서 고려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게 또 친박과 갈등을 일으킨다”며 “이제 친박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

같이 말했다.

그는 “친박이 있었다면 홍 대표가 70% 가까이 지지를 못 받았을 것”이라며 “친박이라든지 계파 프레임에 갇혀서 기사를 쓰지 말고 최고위원 김태흠이 당 대표에게 당 운영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

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재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대 출마 당시 약속드린 게 있다. 정부여당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명분을 갖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겠다”며 “또 당내에선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직언하고 쓴 소리를 하겠다. 약속드렸는데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